

청소노동자 휴게실 반드시 만들어야

8 편집국 | ㉠ 승인 2011.08.18 09:18

| 17일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방안 토론회' 열려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조, 정부관계자, 건축사, 노동환경 연구자가 머리를 맞댔다. 17일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방안 토론회'가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열렸다. 발제자로는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 제도개선 연구팀의 김미정 건축사가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위생실장, 정원태 건축사, 최종화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담당, 김정연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휴게공간 설치 제도화 방안 및 노동안전보건 강화방안'에 관해 발제에 나선 김미정 건축사는 "청소노동자의 업무는 단순 청소가 아니라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그런 분들의 휴게실을 '유지관리시설'이라는 이름으로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페인단의 제도개선 연구팀은 지난 4월부터 서울지역 청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벌였다. 캠페인단의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노동자의 82.8%가 휴게실이 있었지만, 안정적인 공간이 아닌 지하실이나 기계실, 피트 또는 계단 아래처럼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곳에 설치해놓은 경우가 64.5%나 됐다.

아울러 김 건축사는 "건물을 처음 지을때부터 청소노동자의 휴게실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미 만들어진 건물에 휴게실을 만드려면 공간도 없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원태 건축사도 "건축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건축주의 사적인 이익을 제한하는 법"이라며 "법만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실을 만드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조, 정부관계자, 건축사, 노동환경 연구자가 머리를 맞댔다. 17일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방안 토론회'가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열렸다. 발제자로는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 제도개선 연구팀의 김미정 건축사가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위생실장, 정원태 건축사, 최중화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담당, 김정연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휴게공간 설치 제도화 방안 및 노동안전보건 강화방안'에 관해 발제에 나선 김미정 건축사는 "청소노동자의 업무는 단순 청소가 아니라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그런 분들의 휴게실을 '유지관리시설'이라는 이름으로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페인단의 제도개선 연구팀은 지난 4월부터 서울지역 청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벌였다. 캠페인단의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노동자의 82.8%가 휴게실이 있었지만, 안정적인 공간이 아닌 지하실이나 기계실, 피트 또는 계단 아래처럼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곳에 설치해놓은 경우가 64.5%나 됐다.

아울러 김 건축사는 "건물을 처음 지을때부터 청소노동자의 휴게실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미 만들어진 건물에 휴게실을 만드려면 공간도 없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원태 건축사도 "건축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건축주의 사적인 이익을 제한하는 법"이라며 "법만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실을 만드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최중화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담당자는 "현행 건축법은 사용에 관한 법이 아닌 '절차'에 관한 법"이라며 "건축법으로 휴게공간을 명시하는 것은 어렵다"며 근로관계법령에서 다루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이견을 나타냈다.

청소노동자의 휴게실이 실제 설치되기 위해서는 법제도 재정뿐 아니라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키기위한 노력도 병행돼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7월 25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사업주에게 위생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조항이 신설됐다.

이와 관련해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위생실장은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으로 계산원 노동자들에게 의자가 제공됐지만, 실제 계산대에 앉을수가 없었다"면서 "법만 바꾼다고 되는것이 아니라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연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 사무관도 "청소노동자 휴게실 관련 법령 개정된 이후 엉뚱하게 아파트 주민대표에게 항의전화를 받았다"며 "이 법이 사업주와 건물주를 규제하는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국민전체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공공운수노조가 참여하는 '청소노동자에게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캠페인단, 김진애 민주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24일 2차 토론회가 진행된다.



편집국 kctuedit@nodong.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